



여의도연구원

국민행복을 디자인합니다

Vol.2016-08

여연 포커스

YDI FOCUS

발행일 2016년 9월 26일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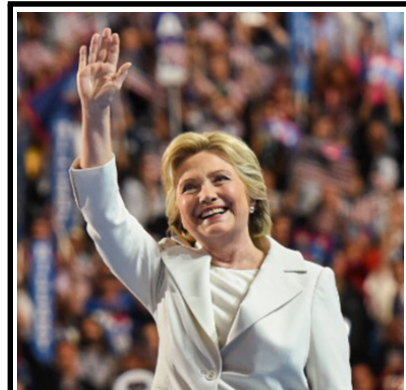
〈 2016 미국대통령 선거 ③ 〉

美 대선, 이번 일어날까? - 정당 강령과 후보연설 비교분석 -



도널드 트럼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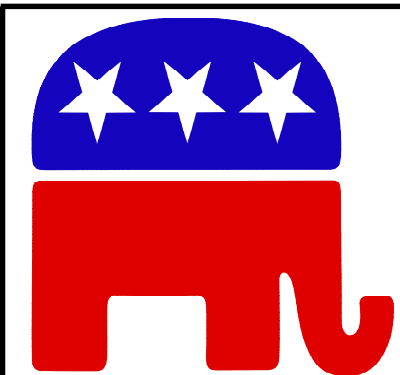
'미국 촌뜨기들의 후보'
'미국만 생각하는 후보'
'대중을 아는 동물적 후보'



힐러리 클린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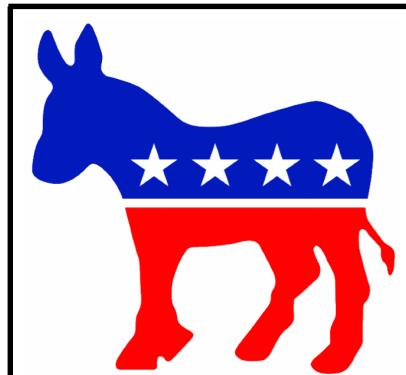
'미국 엘리트들의 후보'
'소수자 생각하는 후보'
'공직 두루거친 준비된 후보'

VS



공화당

“미국의 이익이 먼저다”



민주당

“미국의 책임을 다한다”

- 목 차 -

要 旨	i
I. 2016년 미국 대선: 후보경선의 결과와 전당대회	1
II. 전당대회의 결과와 정당 강령	3
III. 공화당: 미국적 가치의 회복	4
IV. 민주당: 민주적 가치의 회복	10
V. 후보수락연설과 그 이후	15
VI. 한국에의 시사점	19

〈2016 미국대통령 선거 ③〉

美 대선, 이번 일어날까?

- 정당 강령과 후보연설 비교 분석 -

작 성 유 성 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담 당 유 성 현 (여의도연구원 연구원)

2016 미국 대통령 선거현황 및 정책이슈 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총 6차에 걸쳐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본 3차 보고서는 미국 대선 양당 전당대회와 정당 강령 및 수락연설을 비교하는 글로,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여의도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속보고서 발간 현황 - 1차 정권 재창출인가, 정권 교체주기인가?
2차 미국 대통령 선거 '이슈와 정책'



여의도연구원

《 要 旨 》

- 2016년 대선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대결로 결정된 상황임
 - 잘 알려진 것처럼 이번 선거는 3선 제한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마하지 못하는 공식선거로 현직자 이점이 존재하지 않는 선거임
 - 공식선거에서는 통상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세 요소 즉, 정당, 후보, 이슈 중 후보와 이슈가 부각되기 쉬운 배경을 제공한다고 이해됨
- 이런 선거에서는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정당이 얼마나 결집하고 이를 토대로 유권자 동원 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느냐 즉, 얼마나 효과적인 캠페인을 펼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짐
 - 민주당 클린턴 후보의 경우 별다른 논란 없이 차분히 선거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반면,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지속적인 논란과 함께 캠페인 총책임자였던 매나포트(Paul Manafort)가 8월 19일 선거캠프 스태프 교체에 따른 반발로 사임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이 대선이 있는 해 야당과 집권당의 순서로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양 당의 정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하는 것과 정당의 정책방향과 집권 이후의 계획을 담고 있는 정당 강령을 채택, 인준하는 것임
-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발표된 강령은 그 세부적인 내용에 앞서 제시된 서문에서 미국의 예외주의에 대한 믿음과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원칙에 기반한 공화당의 정책을 재확인하고, 민주당 행정부가 이러한 미국의 원칙과 자율성을 훼손해 왔다고 비판하고 있음
 - 아메리칸드림의 재건, 헌법질서의 부활, 천연자원, 정부개혁, 위대한 미국 사회 건설, 미국의 재도약 등 모두 여섯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주제의 기술방식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행정부,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며 공화당 행정부는 미국적 가치와 원칙에 근거해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음

-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트럼프의 수락연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사회의 경제·사회에 관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연설을 시작하고 있음
 - 자신을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후보로 지칭하고 미국 사회의 문제들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천명한 후, 미국을 다시금 강하게, 자랑스럽게, 안전하게,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 지음
-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강령은 서문에서 분열보다는 통합의 중요성, 경제불평등 문제에 대한 단호하고도 직접적인 해결, 환경문제, 다양성 증진 등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핵심원칙임을 천명하고 있음
 - 중산층 재건과 양질의 직업 양산, 경제불평등 해소 등 경제부문, 인종/성별/종교 등에 기인한 차별과 불평등 해소 등 사회부문, 선거권과 선거자금 그리고 민주주의 제고 등 정치부문,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 등 환경부문, 교육과 건강, 안전 등 사회정책부문, 미국의 리더십과 안보위협에 대한 정책 등 국제부문 등이 거명되고 있으며 민주당이 주창하는 미국의 가치들과 세계 여러 지역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마무리하고 있음
- 힐러리 클린턴의 수락연설은 미국 건국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로부터 시작됨. 이는 전당대회가 개최된 필라델피아의 상징적인 의미를 되짚고 건국 초기부터 미국을 지탱해 온 힘은 분열보다는 통합 그리고 협력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
 - 영부인, 연방상원의원, 국무장관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서 자신의 이력들이 공적인 사안에 대한 관심과 사회문제 해결 등 공공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혼자서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강조함

I. 2016년 미국 대선

: 후보경선의 결과와 전당대회

- 2016년 대선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대결로 결정된 상황임
- 잘 알려진 것처럼 이번 선거는 3선 제한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마하지 못하는 공석선거(open seat election)로 현직자 이점(incumbency advantage)이 존재하지 않는 선거임.
- 이와 같은 선거에서는 통상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세 요소 즉, 정당, 후보, 이슈 중 후보와 이슈가 부각되기 쉬운 배경을 제공한다고 이해됨
- 보다 자세히 말해 선거의 장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는 선거 때마다 변치 않는 장기적 요인인 정당, 선거 때마다 가변적인 성격을 가진 후보, 이슈가 주된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되는데 공석선거에서는 특히 후보의 새로움이 부각되기 쉬운 까닭에 단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해됨
- 따라서 이런 선거에서는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정당이 얼마나 결집하고 이를 토대로 유권자 동원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느냐 즉, 얼마나 효과적인 캠페인을 펼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짐
- 후보결정 이후 전당대회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양상을 보면 민주당 클린턴 후보의 경우 별다른 논란 없이 차분히 선거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반면,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지속적인 논란과 함께 캠페인 총책임자였던 매나포트(Paul Manafort)가 8월 19일 선거캠프 스태프 교체에 따른 반발로 사임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사실 이러한 모습은 양 당 전당대회의 양상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음.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민주당 전당대회가 경선과정에서 강력한 경쟁자였던 샌더스 상원위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영부인 미셸 오바마, 조 바이든 부통령, 오바마 대통령 등 민주당 지도부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결집된 모습을 보였음

- 반면, 7월 18일에서 21일까지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있었던 공화당 전당대회에는 공화당 출신 전 대통령들이 모두 불참하였고 이전 후보들 중에서 1996년 후보였던 밥 돌 전 상원의원만이 참석하는데 그치는 등 공화당 주요 정치인들의 다수가 불참한데다가 이번 경선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찬조연설에서 “양심에 투표하라(vote your conscience)”고 발언, 노골적인 반대의견을 표출함으로써 내부적으로 분열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났음

- 이렇듯 극명한 차이를 보인 양 당 전당대회의 양상은 공화당이 여전히 내부의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려주고 있음

Ⅱ. 전당대회의 결과와 정당 강령

- 대선이 있는 해 야당과 집권당의 순서로 개최되는 전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양 당의 정·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하는 것과 정당의 정책 방향과 집권 이후의 계획을 담고 있는 정당 강령(party platform)을 채택, 인준하는 것임
- 먼저 후보 지명과 관련하여 공화당은 경선결과를 반영하여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고, 트럼프는 인디애나 주지사인 펜스(Mike Pence)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였음. 펜스 주지사는 보수성향의 정치인으로써 티파티 운동의 지지를 받는 인물로 당내 지지기반이 취약한 트럼프의 약점을 상쇄하는 한편, 인디애나 주가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를 핵심경합주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민주당은 경선의 승리자인 힐러리 클린턴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고, 버지니아 주의 상원의원 케인(Tim Kaine)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음. 케인 상원의원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환경, 에너지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온건한 성향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버지니아 주지사로 재임하던 2007년 발생한 버지니아공대 총격사건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어 안보 문제에도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음. 더불어 버지니아 주가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에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임
- 후보 지명과 함께 전당대회에서는 양 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강령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채택되는 정당의 강령은 정당의 주요 정책적 입장을 명확히 공포하고 집권 이후 시행할 주요 정책의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공식선거의 형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높음
- 이번 보고서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채택한 정당 강령을 중심으로 양 당이 중점적으로 제시하는 이슈와 정책들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두 정당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시사점을 간략하게 제시할 것임

Ⅲ. 공화당의 정당 강령(Party Platform) : 미국적 가치의 회복

1. 전체적인 구성

- 7월 18일 발표된 공화당의 강령에서 각 주제의 세부적인 내용에 앞서 제시된 서문(preamble)을 보면 미국의 예외주의에 대한 믿음과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원칙에 기반한 공화당의 정책을 재확인하고, 민주당 행정부가 이러한 미국의 원칙과 자율성을 훼손해 왔다고 비판하고 있음
- 본문의 내용은 아메리칸드림의 재건(Restoring American Dream), 헌법질서의 부활(Rebirth of Constitutional Government), 천연자원(America's Natural Resources), 정부개혁(Government Reform), 위대한 미국사회 건설(Great American Families, Education, Healthcare, and Criminal Justice), 미국의 재도약(America Resurgent) 등 모두 여섯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주제의 기술방식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행정부,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며 공화당 행정부는 미국적 가치와 원칙에 근거해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음
- 또한 미국의 재건을 이야기하면서 아이젠하워, 레이건 등 공화당의 전임 대통령들의 업적을 수시로 거명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함. 이러한 기술 방식은 트럼프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공약들이 그 내용의 과격함에 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결여되고 있기에 과거 공화당 행정부의 업적에 비추어 재확인하면서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2. 주요 정책 개괄

① 경제부문(Restoring American Dream)

: 권력의 분산과 정부개입의 최소화

- 소극적 정부원칙의 재확인 : 정부는 번영을 창조하기보다는 이를 제한 혹은 파괴할 수 있음. 번영은 개인들의 극기(self-discipline), 창업정신, 저축과 투자의 산물임
-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가 이야기하는 저성장의 뉴노멀(New Normal) 경제를 부인함. 레이건 행정부 시기 어려운 경제를 극복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금의 진단이 허구임을 주창
- 계층 간 분열을 조장하는 세금정책에 대해 반대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주창하는 행동주의적 판결들에도 반대함
- 무역협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천명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떠한 무역협정에도 반대할 것이라 주장함, 중국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이러한 방침을 재확인함
- 2011년 실행된 월가 금융규제 강화 개혁법안인 Dodd-Frank Act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1)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함. 특히 이 법안이 만들어 낸 행정부 조직인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표명함
- 이의 연장선상에서 연방정부 조직의 비대화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개혁을 요구함. 개혁의 초점은 연방정부의 권한 중 많은 부분을 주정부에게 돌려줄 것에 있음
- 경제부문에서 공화당 강령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첫째, 연방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확장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 둘째,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연방정부의 권한을 주정부에게 이양할 것. 셋째, 권한 이양의 구체적인 정책 분야들은 세금, 최저임금, 노동규제 등이며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은 더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음

② 사회부문 I(Rebirth of Constitutional Government) : 헌법질서의 부활

- 헌법에 나타난 네 가지 기본원칙 재확인 : 제한된 정부(limited government), 권력의 분산(separation of powers), 개인의 자유(individual liberty),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 연방법원에 대한 비판 : 미국의 헌법적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동성 간 결혼, 낙태 등에 대한 연방법원의 진보적 판결의 영향을 고려한 반응으로 보임. 이후 연방대법관 지명과 인준 문제와 연계하여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
- 이후의 내용은 미국 건국 당시 연방헌법이 승인될 때 이에 부가되어 같이 통과된 10개조의 개정안들(amendments: 개인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고도 불림)을 제시하며 훼손된 헌법질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주로 논쟁이 되는 사안은 동성 간 결혼과 관련된 일련의 사법 판결에 대한 비판과 그러한 판결이 초래한 개인권리 침해에 집중되어 있음. 연방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종교집단과 개인의 목소리를 자유와 권리 보장(First Amendment)의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함을 주창함
- 더불어 총기소유의 권리(Second Amendment), 정부로부터 사적 영역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Fourth Amendment),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적 해석(Fifth Amendment) 낙태금지를 주창하고 이와 관련하여 낙태권의 보장을 주장하는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금지할 것을 천명함
- 요약해보면 사회부문에서 공화당의 강령은 낙태와 동성애 등 가치갈등 이슈를 둘러싼 보수적인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이 사회질서를 저해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음
- 더불어 이는 미국 사회의 문제들이 연방정부의 사적 영역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서 초래되었다고 보는 입장임. 특히 연방법원의 판결이 갖는 영향력에 주목하고 연방대법관 임명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금 각인시키고 있음

③ 사회부문 II(Great American Families, Education, Healthcare, and Criminal Justice) : 보수가치의 회복을 통한 위대한 미국사회 건설

-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연방정부의 개입에 대한 비판이 골자
- 동성 간 결혼 합법화에 대한 비판. 가족질서를 해치고 아이들의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함
- 교육부문에 있어서 연방정부에 의한 과도하고도 일률적인 개입에 반대. 민주당 행정부의 방식을 “one-size-fits-all approach”라고 명명하고, 교육현장을 잘 아는 주정부 주도의 교육정책 천명
- 학교 선택권 확대, 동성애 이슈 학교 정책에의 반영 반대, 고등교육기관의 이념적 편향성 비판, 높은 등록금 문제 해결책 등이 담김
- 건강부문에 있어서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of 2010)의 폐지 주창. 소비자 선택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낙태’를 건강관리 문제로 편입하여 생명존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
- Stem Cell Research 허용 확대, FDA(Food and Drug Agency)의 규제 철폐 주장
-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공화당을 “a party of law and order”임을 강조하면서 범죄와 관련한 법률의 간소한 재정립, 범죄의 처리와 관련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명료화, 주정부의 재량권 확대, 사형제 합헌 재확인, 약물과의 전쟁 등을 제기하고 있음

④ 정부 부문(Government Reform) : 정부 관료와 규제의 축소

-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에 의한 연방정부 운영의 결과를 “과도하게 확대된 무반응 관료국가(bloated and unresponsive bureaucratic state)”로 규정하고 다양한 부문에서의 정부개혁 촉구
- 우선 저소득층과 노인층을 위한 의료부조제도인 Medicare와 Medicaid, 그리고 은퇴 후 연금제도인 Social Security 제도를 관리기구의 슬림화, 프로그램의 개선 등을 통해서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특히 핵심적인 내용은 예산

지원은 연방정부가 하되 그 사용은 주정부의 자율에 맡기는 운영방식(Block granting)을 채택하여 연방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겠다고 주장

- 트럼프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이민정책도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나,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불법이민자의 사면을 전면 금지하고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입국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겠다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 이외에 새로운 것은 없음
- 연방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과도한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때문에 몇몇 기관들을 전면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거명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들은 IRS(Internal Revenue Service),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D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LRB(Department of Labor and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등이 있음

5] 환경 에너지 부문(America's Natural Resources)

: 개발에 대한 실용주의 노선

- 농업 등 자연환경과 결부된 분야에서 민주당 행정부의 정책을 연방정부의 확대와 이를 통한 규제, 자율성 억압의 측면에서 파악하며 비판함
- 특히 연방정부의 정책을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unelected bureaucrats)”에 의한 정당성 없는 규제 그리고 당파적인 민주당의 정치 이슈 확산의 일환으로 비판하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가 중시하는 환경문제 역시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에 기인한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가 보다 적합한 주체임을 강조
- 또한 유엔 등을 통해서 제기되는 환경문제가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토협약(Kyoto Protocol)과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환경문제에 관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정책들, 예를 들어 국내에너지생산 증대, 공유지 개발, OPEC과 다른 원유생산국들의 담합 규제, Keystone XL Pipeline 추진 등을 펼칠 것임을 천명함
- 이러한 정책들은 공화당이 환경문제를 심각한 전지구적 문제로 간주하기 보다는 국내경제적인 그리고 무역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줌

6] 국제부문(America Resurgent) :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 현재 미국이 처한 국제사회의 곤경은 카터 행정부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진단. 미국의 쇠퇴는 중국, 러시아, IS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레이건 식의 “힘을 통한 평화구축(peace through strength)”으로의 전환을 촉구함. 이를 위해서는 군축협정 폐기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
- 미국의 군사조직 재정비와 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 강화, VA(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개혁
-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미국의 위치를 재확립 : 아이젠하워와 그 이후 공화당 대통령들에 의해 유지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치 재구축
- 구체적으로 전세계 각 지역 즉, 중동, 이스라엘,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남 아메리카, 아프리카, 국제기구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들을 정리함
- 주요 내용으로는 이란과의 협정 파기, 이스라엘관계 확고히 유지, 북한과 중국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책임 있는 동맹으로서 NATO의 재정립, 쿠바와의 관계 개선 재고(再考) 등이 기술 되어 있음
- 더불어 UN이 추진하는 반 이스라엘 정책, 여성/아동/장애인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컨벤션, 군축조약, 환경과 개발정책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임을 재천명

IV. 민주당의 정당 강령(Party Platform)

: 민주적 가치의 회복

1. 전체적인 구성

- 7월 21일 채택된 강령의 서문에서 분열보다는 통합의 중요성, 경제불평등 문제에 대한 단호하고도 직접적인 해결, 환경문제, 다양성 증진 등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핵심원칙임을 천명하고 있음
-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술되어 있음
- 중산층 재건과 양질의 직업 양산, 경제불평등 해소 등 경제부문, 인종/성별/종교 등에 기인한 차별과 불평등 해소 등 사회부문, 선거권과 선거자금 그리고 민주주의 제고 등 정치부문,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 등 환경부문, 교육과 건강, 안전 등 사회정책부문, 미국의 리더십과 안보위협에 대한 정책 등 국제부문 등이 거명되고 있으며 민주당이 주창하는 미국의 가치들과 세계 여러 지역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마무리하고 있음
- 미국의 쇠퇴와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에 집중되어 있는 공화당의 강령과 비교해서 미국은 현재 국내외의 위협에 잘 대처하고 있으며 경제불평등 완화와 다양성 증진 등이 미국 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방안임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함

2. 주요 정책 개괄

① 경제부문 : 중산층 재건과 경제불평등 완화

-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 : 최저임금수준을 15달러 까지 상승,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성별차이 없는 동등한 급료 지급, 가정과 양육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이익공유제 실시
- 저소득층, 장애인, 퇴역군인, 노년층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 약속
- 사회보장연금의 보호와 확대. 이를 위한 재원으로 고소득층(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에 대한 소득세 부과 및 연방정부의 지원 확대
- 우체국 등 공공부문에 대한 사유화 반대
- 21세기형 산업구조 구축, 기후변화에 발맞춘 제조업 개선과 새로운 직업창출, 과학/연구/교육/기술 분야의 혁신 추진, 규제완화를 통한 소기업 보호, 청년층을 위한 직업창출 등을 정책의 초점으로 제시
- 월가와 금융제도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 Dodd-Frank 금융개혁법 사수, 금융 거래세 신설, 연방준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의 독립성 확보, 법무부를 통한 반독점 규제
-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감면과 부유층 과세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 : 중산층의 민주당 vs. 부유층의 공화당으로 프레임
- 외국과의 경제·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review) : 공정한 기준과 참여국가의 기준 준수 강제방안이 없는 협정은 참여치 않을 것이며, 이러한 원칙에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도 예외가 아님

② 사회부문 : 차별철폐와 불평등 해소

- 인종과 성별 등에 기인한 경제, 정치, 사회 등 모든 형태의 불평등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장 그리고 미국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함
- 불평등은 편향된 정부 정책의 결과. 부의 불평등은 자유시장질서 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이의 완화를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이 필요
- 인종 프로파일링 중지, 약물과의 전쟁 등에 있어서 특정 인종에 대한 편향성 해소 등은 형법정의 실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함. 인종 편향성으로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두 분야 즉, 마리화나 규제완화와 사형제 철폐 주장
- 강제추방 없는 온건한 이민정책의 지속, 이민자와 난민들에게 종교적 테스트를 부과하려는 시도에 반대, 시민권 보장 등의 정책 추진
- 여성, LGBT, 장애인, 종교의 자유 보장
- 농업 보호와 빈곤층 구제(세금공제제도를 통한 정책 지속: Earned Income Tax Credit, Child Tax Credit)

③ 정치부문 : 선거권 보장과 민주주의 증진

- 투표권 보장정책 : 조기투표와 우편투표 확대, 유권자등록제도 간소화, 당파적·인종적 선거구 획정부정(gerrymandering) 방지, 선거일 휴일제 시행 추진
- 선거캠페인 재정제도 개선 : FEC(Federal Election Commission)의 감독 권한 강화, 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super PACs 폐지 노력
- 정부개혁 : 유권자 친화적인 정부로, 정부에의 접근성 강화 노력

④ 환경부문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

- 민주당은 (공화당과 달리) 환경문제가 지구적인 문제와 양질의 직업 창출 간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병립할 수 있는 문제로 봄
- 주와 지방정부가 보다 유연한 환경정책을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연방정부도 이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
- 환경문제는 일차적으로 저소득, 비주류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 간단히 말해 환경적 인종주의(environmental racism).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깨끗한 공기와 물은 모두가 누려야하고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임
- 오바마 대통령의 Keystone XL pipeline 반대에 동의하며 북극 그리고 대서양 연안에 석유시추를 반대하며, 환경과 자연보존을 저해하는 모든 노력들에 반대할 것임

⑤ 사회정책부문 : 소수자를 위한 권리와 복지 확대

- Community college 등을 무료화하고 대학생 부채 완화 지원정책을 실시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권 보장
- 소수인종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지원, 이익추구형 교육기관 감독처벌(트럼프 대학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임)
- 유아를 위한 교육 보장, 교원, 교육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 시험에 기반한 처벌(test-and-punish) 교육시스템 종식
- 건강보험은 특권이 아닌 권리, 따라서 의료보험제도는 공공성을 가져야 함. 오바마케어 유지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부조제도(ACA's Medicaid)가 현재 19개 주에서 모든 주에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
- 공공건강센터 확충, 제약회사의 횡포 감독을 통해 약 처방조제비, 약값 인하를 추진
- Reproductive Health, Rights, and Justice (실질적으로는 낙태에 대한 권리를 의미) 보장
-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 총기사용 규제 추진

⑥ 국제부문 : 미국의 리더십과 동맹 강화

- 원칙에 기반한 리더십과 이를 통한 평화와 안정체제 구축 : 미국은 국제사회의 모범적 리더로서 역할을 포기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견지해야 할 것임
-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 트럼프의 강경하고 독자적인 국제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함
- 트럼프의 무슬림 비방은 미국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결국 미국의 리더십을 해침으로써 미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
- 미국이 처한 국제적인 위협으로 테러리즘, 시리아, 이란, 북한, 러시아,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을 거명, 각 위협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을 비판함. 예를 들어, 트럼프의 핵무기와 관련한 언급은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져 결국 미국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 비판
- 기후변화를 긴급하고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인식. 트럼프와 공화당이 기후 변화와 이에 따른 위협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과장된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민주당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추진할 기후변화에 대처할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미국이 국제사회에 확산할 여러 가치들을 제시 :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 보장, LGBT 등 문화·사회·경제·인종적 약자들의 권리 보장, 반부패, 아동의 권리 보장, 고문 금지 등
-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은 미국의 안전과 경제적 번영에 위협한 실수가 될 것. 원칙에 근거해서 사안에 대처해야 할 것
- 주목할 만한 지역정책으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지속과 중국의 적극적 역할 요구, 무역·통화·검열·인권 등과 관련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 지속,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 유지와 대만과의 안전보장협정 준수, 강고한 이스라엘 관계 유지하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국가 정책(two-state solution) 유지, NATO 동맹 강화, 쿠바와 남미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UN 등 국제기구의 역할 지지와 협력 약속 등이 있음

V. 후보수락연설과 그 이후

- 민주·공화 두 정당의 정·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후보지명의 소감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수락연설을 하게 되어 있음

1] 트럼프 : 미국우선주의와 법질서(law and order) 강조

-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트럼프의 수락연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사회의 경제·사회에 관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연설을 시작하고 있음. 이는 현재 미국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그 책임이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임
- 트럼프 연설의 핵심적인 주장은 “미국 우선주의(put America first)”를 주창하면서 미국 사회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자로 자신을 내세우고 있음(system is rigged against our citizens... I alone can fix it)
- 공화당 강령에 제시된 주요 이슈들 요컨대, ISIS 격퇴, 이민문제, 무역협정 재검토, 감세, 정부규제 철폐, 대법관 충원문제 등을 간략하게 거명하고 이 모든 것이 헌법정신과 법질서의 훼손에서 기인한 문제들이라고 단언함
- 자신을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후보(“law and order candidate”)로 지칭하고 미국 사회의 문제들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천명한 후, “미국을 다시금 강하게, 자랑스럽게, 안전하게, 위대하게 만들 것(make America Strong(Proud, Safe, Great) again)”이라는 말로 마무리 지음
- 법질서 재건과 법치에 대한 강조는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펜스의 연설에서도 나타남
- 펜스는 애초에 민주당 지지자였던 자신이 공화당 지지자로 변모한 이유는 미국 사회에 나타난 변화들이 법과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함

- 그는 또한 이번 선거를 새로운 변화와 기존 질서, 아웃사이더 정치인과 기성 정치인 간의 대결로 정의하고, 여러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미국 사회를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함을 역설함
- 트럼프와 펜스의 연설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오바마 행정부 동안 나타난 변화들을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한편 이에 대해 피로감을 갖고 있는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을 결집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이해됨

② 클린턴 : 분열보다는 통합, 경험을 갖춘 준비된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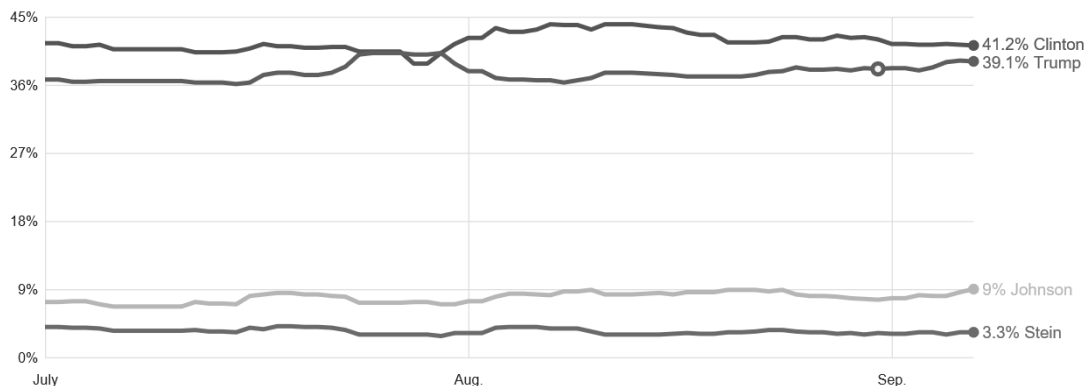
- 힐러리 클린턴의 수락연설은 미국 건국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로부터 시작됨. 이는 전당대회가 개최된 필라델피아의 상징적인 의미를 되짚고 건국 초기부터 미국을 지탱해 온 힘은 분열보다는 통합 그리고 협력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We are stronger together")
- 본인만이 미국의 시스템을 고칠 수 있다는 트럼프의 언급을 비꼬(I alone can fix it → We will fix it together). 더불어 트럼프의 성장배경을 자신의 그것과 대조하면서 스스로 중산층을 대변하는 후보임을 각인시키려 함
- 영부인, 연방상원의원, 국무장관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서 자신의 이력들이 공적인 사안에 대한 관심과 사회문제 해결 등 공공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혼자서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강조함
- 더불어 자신은 여성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차별과 유리천장을 깨뜨리며 이 자리에 섰으며 이는 미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언급함
- 연설에 거명된 사안들은 민주당 강령의 내용을 망라하고 있음. 예를 들어 소득불평등 문제의 심각성, 기후변화, 포괄적 이민개혁, 민주주의의 복원, 총기규제 등이 대표적임

-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케인의 연설은 신뢰할 수 있는 후보로 클린턴을 내세우는 한편,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함
- 트럼프 비판의 초점은 그가 “나를 믿으라(Believe me)”만을 주장하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의 태도가 아님
- 반면 클린턴은 새로운 변화를 선도해 왔을 뿐 아니라 다양한 공직 경험을 통해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스페인어로 ‘준비된’의 의미를 갖는 ‘listo’ 언급, ‘She is ready to fight, win, and lead’라는 말로 맺음)
- 요약해보면, 민주당 후보수락연설은 트럼프의 분열에 기반한 캠페인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을 강조하며, 후보 자질과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클린턴이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3] 전당대회 이후 여론의 추이

- 전당대회가 있었던 7월 이후 대선 여론의 추이는 다음의 그림과 같음(USA Today 자료)
- 전체적으로 클린턴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전당대회 직후 트럼프 후보의 지지도가 반짝 상승하였으나(전당대회 효과: Convention Bump),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상당한 격차로 클린턴 후보가 앞서 가다가 9월 들어 다시 박빙의 판세로 바뀌고 있음

Historical Averages



출처: USA투데이 홈페이지 (<http://www.usatoday.com/pages/interactives/2016/election/poll-tracker/>. 2016년 9월 8일 현재)

- 박빙으로 변화한 최근의 판세는 7월말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용한 캠페인을 이어간 반면, 트럼프 후보는 계속적으로 논란성 발언을 쏟아 내고 멕시코 대통령과의 이벤트성 면담 등을 통해 여론의 주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지자 동원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통상 9월 첫 주에 있는 노동절 연휴 직후 여론의 추세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트럼프의 추격은 향후 판세를 알 수 없는 구도로 바꾸어 놓았음. 물론 전국적인 지지율은 간접선거가 결합된 미국의 선거제도를 고려할 때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판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세부적인 검토를 필요로 함

- 하지만 박빙으로 변한 최근의 판세는 적어도 곧 시작된 후보 간 토론회의 중요성을 한층 높였다고 보임. 특히 토론회에서 누가 얼마만큼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는지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VI. 한국에의 시사점

: 미중관계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 민주·공화 두 정당의 강령과 후보수락연설을 통해 본 현재까지의 공약내용에서 한국 관련 입장은 주요하게 언급되지 않음. 이는 한국에 대한 정책이 두 후보 모두에게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거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 안보적인 측면에서 북한 이슈는 두 정당 모두에게서 강경한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어 있음. 다만 현재 북한에 대해 무력제재 이외의 대부분의 제재수단이 실행 중에 있고 향후 미·중 관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방향이 얼마나 현실화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려움
- 중국에 대한 입장은 민주·공화 모두에게서 안보·경제적인 측면 모두 강경한 정책방향이 천명되어 있음. 다만 민주당이 제도와 규범을 중시하면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여 군사력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터무니없는(preposterous) 것으로 일축하고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양 당 모두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화폐조작, 인터넷 검열, 지적재산권 침해, 사이버 공격 등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공통적으로 주창하고 있음
- 이러한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은 우리의 입장에서 전략적이며 유연한 외교를 취할 필요성을 제기함. 즉, 사안에 따라 때로는 미국의 때로는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양 국 사이에서 자율성을 갖고 균형을 잡는 해안이 필요한 상황임
- 누가 승리하든 안보·경제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부담의 요구가 더해질 것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여러 이슈 중 우리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안은 역시 북한 관련 이슈로 보임
- 따라서 극도의 경색국면 속에 대부분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현재의 남북한 관계에서 벗어나서 어떤 방식이든 남북한 관계의 접촉면을 넓히고 이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외교를 구사하는데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요컨대 안보와 무역의 압박에 대해 북한문제와 남북한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그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여의도연구원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정당 발전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연포커스」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연포커스」의 전문을 www.ydi.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기계산업진흥회 신관 3층
전화: (02) 2070-3300 팩스: (02) 2070-3331 (우 07238)